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4~7 면

진보대통합

진보신당 당대회
이후의 쟁점과 과제

▶ 10 면

이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12 면

대담

유럽 반긴족 투쟁,
아랍 혁명, 좌파의 과제

▶ 13 면

서울대 법인화

점거 해제의 전말과
향후 과제

▶ 11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60호 | 2011년 7월 2일 ~ 7월 15일 | 값 1,800원

리포트21

희망을 보여 준 그리스 노동자 총파업

그리스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목을 매는
자국 정부를 버랑 끌기로 내몰고 있다.

6월 28일부터 48시간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 파업과 대규모 시위 때문에 그리스 정
부는 혼란에 빠졌다. 유럽 지배자들은 유럽
대륙 민중에게 자기 의도를 강요할 능력이
시험에 들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은 지난해 도입
된 '구제 정책'의 대가로 강요된 고봉전가에
반대해 강력한 총파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노총들은 이번을 계기로 최초로 하
루 총파업을 뛰어넘는 투쟁을 벌이게 됐다. 이
것은 그동안 많은 노조원의 염원이기도 했다.

여기에 이미 진행 중인 전역 노동자 파업
과 시위대의 광장 점거가 결합되자 그리스
정부는 공포에 휩싸였다.

6월 29일 그리스 집권 사회당은 의회에서
추가 긴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유럽연합과 IMF는 의원들이 추가 긴축안
을 통과시켜야 그리스에 1백20억 유로를 지
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8천 유로

새로운 긴축안에는 연간 소득이 8천 유로
[약 1천4백만원]보다 적은 노동자들에게 '소
득세'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앉아서 당할 생각이 없
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응답자의 70퍼센트
에서 80퍼센트가 긴축안에 반대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발행
하는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강력하며 정부는 조조해하고 있습니다.

"운수 노동자들이 파업에 합류하면서 이
번 행동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들의 파업 덕분에 일하러 나갈 생각이
있던 노동자들도 출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파업 참가자 수천 명이 파업 집회를 벌인
후 신타그마 광장의 의사당 건물 앞에서 항
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모였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광장 점거 운동에서 영감
을 받아 수주 동안 광장을 점거하고 긴축 반
대 투쟁을 벌여온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습
니다.

"많은 사람이 48시간 파업 동안 신타그마
» 3면으로 이어짐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집권당은 포퓰리즘에 침몰된 ‘콩가루 집단’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의 분노 폭발

“한국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국민들에게 나라가 온통 썩은 것처럼 보인다. 온통 나라가 비리투성이 같고”
이명박, 바로 당선 때문이거든

“춘향전이 뭐니까? 번 사포가 춘향이 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따먹문수’로 데뷔한 김문수

“나는 양극화라는 표현보다는 부문간 격차 이중구조 심화라고 쓴다. 이 단어가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기재부 장관 박재완의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박근혜를 물려져 달라”
안상수의 대선 출마 선언에 기뻐하는 네티즌들

“만약 항공기에 명중했다면 제2의 천안함 사건이 됐을지도 모른다”
아시아나기에 총 쏜 한국군을 비웃는 중국 언론

“한국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을 하곤 했다. 그랬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더 더러운 존재는 우리였다”

캠프캐월에 고엽제를 묻었던 미군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파병을]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파병에 대한 ‘양심’을 지키는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았다.”

참여당 대변인 이백만의 알 듯 모를 듯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체포 당시부터 석방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통역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심지어 검찰의 공소장도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받았고 번역도 엉터리였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읽지도 못하는 한국어로 된 조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그래서 무죄 석방된 한 노동자는 “나는 우리가 무죄를 인정받을 거란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다.

이 베트남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파업에 동참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지원과, 대책위의 활동이 승리의 결정적 동력이었다. 이미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결성됐음에도, 대책위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대책위는 선고 전에 2천 명이 넘는 탄원서를 조직해 제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백 명을 비롯해 주요 진보 단체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진보적 법학자들도 처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원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조직됐다.

특히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지원을 조직하고 훌륭한 통역자 구실을 한 베트남 결혼 이주자인 원옥금 씨와 건설노조 활동가들의 구실이 매우 돋보였다. 이들은 직접 숙소에 찾아가 베트남 노동자 70여 명에게서 ‘강요에 의해 파업을 한 것이 아니다’는 진술서를 받아 왔다. 이 진술서를 법정에서 제출할 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던 검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통쾌하기 그지 없다.

베트남 동료들은 주야 12시간 맞교대를 하면서도 재판 때마다 10여 명 씩 참가해 재판을 방청하고, 면회를 하며 구속된 동료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들을 변호한 장서연, 조혜인 변호사는 이전 국선변호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들이 무죄임을 적극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구속 노동자들을 여러 차례 접견하고 기속사까지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집하며 검찰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책위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천의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센터 업무도 제쳐 두고 한 달 내내 이 활동에 뛰어



이번 운동과 승리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생긴 동지애야말로 보물 같은 성과다.

들었고 인천의 ‘이주노동자운동연대’ 소속 단체들, 이주노조, 다함께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함께했다.

대책위는 재판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엉터리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 무고한 노동자들을 잡아 가둔 경기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었다.

담당 판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 사건이 국제적 관심까지 받게 되자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피고인들에게 도리어 불리”하다며 경고했지만, 대책위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 심리가 열린 재판에서는 대책위 측 통역자가 방청석에서 재판 공식 통역자의 부실한 통역을 대신했다. 원옥금 씨는 “공식 통역자가 노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 그러니 제대로 통역할 수가 없다”며 용감하게 재판에 끼어들었다. 검사가 반대했지만 판사는 이 통역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대와 우애

이런 활동들이 구속돼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됐는지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분명해졌다. 한 노동자는 최후진술 때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인들과 변호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다.

약혼자가 감옥에 갇혀 발을 동동 구르며 대책위에 함께 참여했던 베트남 여성 노동자는 재판이 끝난 후 내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베트남 노동자들과 우리는 연대와 우애를 쌓아갔다. 속 깊게도 인천 건설노조 활동가들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석방된 후 겪을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

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본보기 삼아 이주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고 싶어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보기 좋게 좌절됐다. 오히려 정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몬 경찰과 검찰의 부당함과 인종차별적 행태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감스럽게도 노동자들 사이의 소소한 다툼에 대해서는 세 명만 빼고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판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징역형을 받아 추방당하지는 않도록 다섯 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선고 유예 등을 판결했고, 두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는 법원의 이런 판결 취지조차 거슬러 베트남 노동자들 중 일곱 명을 출입국으로 데려가 재구금해 버렸다. 인천 출입국은 아무 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것은 체면을 완전히 구기며 패배한 법무부의 악랄한 보복이다.

석방될 기대에 들떠 있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너무나 놀랐고 분노했다. 한 노동자는 울면서 “아무 잘못도 없이 3개월 동안 갇혀 있던 것도 수치스러운데 우리가 왜 또 갇혀야 하는가? 베트남에 돌아가 굶어 죽더라도 당장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

대책위는 즉각 법무부와 출입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6월 28일에 열린 규탄 집회에는 인천 지역 건설노

조, 금속노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참가해 출입국을 압박했다!

결국 출입국은 일주일 만에 항의에 밀려 다섯 명을 석방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두 명만 안타깝게도 석방되지 못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의 부당한 이중처벌 규정 때문에 강제 추방될 처지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항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위 활동은 이미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낳았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사이에 분열과 적대를 조장하려는 시도를 보기 좋게 좌절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그저 불쌍하고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 줬다며 크게 고무됐다.

무엇보다 이 운동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이 운동에 노동자들, 특히 건설노동자들이 적극 참가한 것은 정말 고무적이다. 건설연맹이 직접 나서 사측을 압박해 사측 스스로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게 한 것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열의 있게 연대했다. 한국인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번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조건에 처해 있고 어떤 차별을 받는지 생생하게 알게 됐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과 연대감과 신뢰가 형성됐다. 이런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경험은 이후에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무엇보다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정원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8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피아노거리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세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 학교),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중국

‘아랍의 봄’에서 영감을 얻은 중국 노동자 투쟁

중국에서 최근 일어난 민공[농촌 이주노동자] 항쟁들은 서로 연관돼 있다.

민공들의 투쟁은 보통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 밑에는 공장에서 자행되는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만 42건이 넘는 파업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초과 노동시간 단축, 적절한 휴식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면서 싸웠다. 그들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더 많은 몫을 얻기를 바라고 불만을 좀더 효과적으로 제기할 통로가 존재하기를 바란다.

중국의 노동자들은 뗏에 걸렸다. 수많은 농민은 공장들로 몰리고 있다. 공장에서 속식은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잃은 후 도시에서 노동력을 파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공장의 삶은 녹록치 않다. 노동자들이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1천 위안, 약

19만 원)으로는 도시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교육을 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꿈도 못 꾸다.

민공들은 승진할 기회도 없다. 다른 곳에서 일할 기술을 배우지도 못한다.

그들은 공장이라는 뗏에 걸려 생애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먹고 살려고 초과노동에 초과노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살 사건은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은 이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노동자들이 학대받는 것은 중국 공장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임금을 노리고 제조업 생산을 중국 공장으로 아웃소싱(외주화)했다.

국제 제조업 상품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중국 정부는 노동법의 적용을 진지하게 관찰시킬 의지가 없다.

또, 노동자들의 고충 처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차이나레이버워치의 조사를 보면, 노동자들은 자기 공장의 노조[중화총공련, 중국의 어용노조]나 노동자 대표가 노동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소요들에서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 진정한 노동조합,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과 고충 처리 제도를 요구했다.

‘아랍의 봄’은 중국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줬다. 즉, 큰 목소리로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줬다.

시드니 양 차이나레이버워치 활동가 차이나레이버워치는 중국 노동자 지원 단체다.(www.chinalaborwatch.org)



7월 2일 오후 3시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 용역폭력 규탄! 유성기업지회 폭력탄압 규탄대회
유성기업 아산 공장 앞
주최: 민중의 힘(존)

7월 3일
교사대회
주최: 전교조

7월 6일
금속노조 하루 파업

7월 9일
한진중공업 2차 희망의 버스

그리스 노동자들이야말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매튜 쿡슨

» 1면에서 이어짐
광장 점거에 동참하러 합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아무리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할 지라도 결코 광장에서 밀려나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8일 이른 오후부터 광장의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유화에 반대하는 전력 노동자 파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직접 행동을 벌이거나 경찰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커다란 힘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48시간 파업을 뛰어넘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조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력 노동자들은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려 합니다. 이런 결의가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유화 대상인 그리스 우체국 은행 노동자들은 이번주 목요일(6월 30일)에 총회를 열어 파업 연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 제2의 도시 살로니카 수도 노동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파업과 광장 점거 등 기층 압력에 떠밀려 그리스 노총은 48시간 총파업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속한 반자본주의좌파(안타르시아)는 지속적으로 하루 이상의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대규모 하루 총파업은 그리스 정부가 얼마나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는지 잘 보여 주는 계기였습니다.”
지속적인 투쟁은 현 그리스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것은 유럽 지배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겠지만, 투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힘을 줄 것이다.



그리스 신타그마 광장의 현수막 '너희에게는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는 혁명이라는 치료약이 있다.'

그리스 위기 — 원인과 대안

현재 그리스 부채 규모는 3천4백억 유로에 이르며 연말에는 1백억 유로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유럽연합, IMF와 유럽중앙은행은 2010년 그리스에 구제금융 1천1백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스 정부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구제금융이 도움이 됐나?
구제금융의 대가로 엄청난 예산이 삭감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추락했고 그리스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긴축 때문에 수십만 명이 실업자가 되면서 정부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
실업자는 갑절로 늘어 80만 명에 이르며(실업률 16퍼센트), 공공부문 노동

자들은 임금과 연금이 각각 20퍼센트와 10퍼센트씩 줄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이란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보통 국채라고 불리는데, 국가는 지출과 세금 사이의 격차를 메우려고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차용증서(IOU)와 비슷해, 정부는 미래에 갚을 약속을 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주로 채권을 소유하는 집단은 은행, 보험 회사, 연기금과 기타 부유한 투자자들이다.
만약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채권 소유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한다.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들

은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빚을 갚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낮췄고, 이 때문에 그리스 국가가 공개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면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제2차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망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리스 구제금융은 평범한 그리스인들을 돕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유럽 은행들을 구제하는 정책이다.

만약 그리스가 부채에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그리스에 많은 돈을 빌려 준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대안은 있는가?
그리스 반자본주의좌파는 부채 상환 중단, 은행 국유화, 금융 시스템의 노동자 통제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그리스 정부는 2010년에만 빚을 갚는데 5백10억 유로를 사용했다. 이 돈이면 연금과 임금 을 지급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갈수록 많은 노조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그리스를 뒤따르는 6월 30일 영국 총파업

보수당이 이끄는 연립 정부의 임금 개악에 맞서 영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6월 30일 1백만 명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영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파업을 우습게 보던 보수당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크게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동시에, 이 파업 소식은 그동안 정부의 긴축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가의 자신감을 높여 주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가 대형 노총과의 협상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임금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한 것은 하루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 지도자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3대 대형 노조 중 하나인 유니슨(공공 부문 노조) 지도자 데이브 프렌티스는 노조 회의에서 “임금 동결을 부수고, 일자

리를 파괴하는 긴축을 부수고, 이 정부가 짐싸고 나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보수당 의원은 정부 자료들이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언론에 전했다.
보수당 연정은 전술을 바꿔 ‘온건한’ 노조와 ‘전투적’ 노조를 이간질하고 약간의 양보를 제시하는 등 전통적인 술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35퍼센트 삭감한다는 계획과 연금 개악안 등 긴축안의 핵심 뼈대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보수당 정부의 긴축 정책에 맞선 투쟁은 세 단계를 거쳤다.
먼저,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첫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곳들에서 다양한 지역적 반긴축 활동들이 벌어

졌다.
그 다음에 지난해 말 긴축에 따른 등 록금 폭등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폭발했다. 셋째 단계는 3월 26일 영국노총(TUC)이 조직한 대규모 시위로 시작됐다.
영국의 반긴축 투쟁은 거리 시위에서 작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긴축 시위는 산업 투쟁에서 힘을 얻고, 산업 투쟁은 시위에서 영감을 얻는 선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스 식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영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제 더는 몽상이 아니다.
사회주의자와 반긴축 활동가 들은 올 가을에 부문을 떠나 전체 노동자가 참가할 수 있는 총파업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총 지도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폴라주 ⑤3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한양,
대신,
폭우 속에서
간헐적으로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일주전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10호(2011년 여름) 가격 : 16,000원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특집 | 진보진영 집권 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연립정부가 “진보정치 집권 전략”이 대선 안 되는 이유 _ 김인식
진보-개혁 연립정부는 지속 가능한가? _ 크리스 하먼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 _ 크리스 하먼과 팀 포터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 _ 폴 블랙레지

현대 진보사상 조류
토니 네그리, 맥락 속에서 보기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쟁점 | 운동 내 이슈들
일본 핵발전소 사고와 반핵 운동의 과제 _ 장호종
소셜 미디어와 사회운동 _ 조니 존스 정하준과 그의 제도주의 비판 _ 이정구
오늘날의 학생운동 _ 정병호 사노위의 실패가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_ 전지윤

마르크스주의 고전 읽기
(임금 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마르크스와 임금 인상 투쟁기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10호(2011년 여름) 가격 : 16,000원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

“통합 진보 정당에서는 복원돼야”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Left21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야만 노동자가 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돼서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거죠.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를 목표로 삼았고 조합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에선 이뤄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뛰어넘자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한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고 봐요.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노동자·민중 주체’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후퇴시킨 데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제 구실을



똑바로 못 하니깐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노총이 주체가 돼서 진보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원칙이 뭘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강령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당을 만들 당시에, 당명을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거냐, ‘진보정당’이라고 할 거냐를 두고 정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노동’이 들어가야 한다고, 노동자 중심의 당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민주노동당의 정신이거든요.

당이 원칙을 퇴색하고 우경화하는 것

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배신감도 듭니다.

분당 당시에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데모당’, ‘민주노총당’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분노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데모당이고 민주노총당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그 당들이 지향하는 바는 민주노동당하고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똑바로 세우고 그 가족들까지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하는 노동자의 이상을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당의 강령이라는 것은 추구해야 할 이상향, 목적,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생명력을 10년 이상 이어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진보정당 운동이 종합적으로 함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



이런 강령들을 손질하면서 이념적 지향성도 퇴색시켰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거고, 민중들이 투쟁하는 건

데 노동자 민중의 미래 세계를 담고 있는 강령을 삭제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당 강령을 후퇴시키면 보수적인 정당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

새로운 통합 진보 정당이 이후에 건설되면 진보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사회당이든 다 참가해서 새롭게 강령을 제정할 때 이번에 후퇴한 내용들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 박노자

“이것은 남한 계급 운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록 지금 민주노동당과 무관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노동계급의 모든 정치 활동가들에게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당장’ 혁명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사회주의’, 즉 무계급, 무권력, 무국가 사회에 근접하려는 의미에서 민중 복지를 확충시키려 노력하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쟁취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삭제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의



노동자·농민·서민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훼손되고,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결국 부르주아 야당의 틀러리가 되는 길이 쉬워집니다.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한 계급 운

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정당들의 강령은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강령은 자본주의 철폐,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와 이윤 추구가 없는 무계급적, 무국가적 사회입니다. 이는 세계적, 국제적 투쟁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 투쟁의 당면 목표, 즉 최소강령은 기본적으로 파쇼 독재 유산의 척결과 복지국가 건설, 노동자들의 일터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등이 핵심이 돼야 할 듯합니다.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인합 공동대표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 속에서 사회주의가 살아나길”

우리사회에는 빈곤과 실업, 각종의 사회적 차별, 수많은 질병 등 온갖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진보적 세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생명이란 자본의 이윤추구를 가장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지 못하면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해결책(가령 복지의 획기적 확대나 심지어 무상의료라 할지라도)도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넘어서서, 인간과 생명의 삶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놓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은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한 진보적 세력의 목표를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장래의 일로 밀어버린 후퇴다. 통합 진보 정당이 되면 반드시 당 강령 속에서 사회주의가 명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정의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세계 곳곳에서 투쟁이 전진하는 데 왜 후퇴합니까”

[이론바 ‘사회주의 강령’은] 민주노조 운동이 그동안 사상·이념적으로 지향해 온 역사적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강령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신념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사라져 온 현실은 안타깝게 돌아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정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투쟁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는] 더 아쉽습니다.

더구나 통합 진보 정당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 활동가들이 통합 진보 정당의 주



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 분들이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래로부터 대중의 힘은 발동하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통합 진보 정당에선 대중 단체들, 대중운동 활동가들의 의지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정파를 초월하여 사회주의 가치 지향을 지켜냅시다”

6월19일, 진보대통합을 결의하는 자리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강령이 삭제됐습니다. 당대회에서 찬반 토론도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수결로 마무리돼 많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공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민중이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비인간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자본 지향이 삭제된 진보대통합 정당이 반신자유주의, 6·15선언 이행을 제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명료한 문제의식 없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1987년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 요구와 더불어서 피로 쓴 “노동해방”이라는 현수막을 전면에 걸고 행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운동의 성과들이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 이상



과 원칙의 계승이라는 민주노동당 강령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중에게 과도기적인 정부의 상이 뭐냐는 것에 답해야 한다는 고민에는 공감합니다. 이는 현재의 강령에도 가다듬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사회주의 가치 지향과 대립되는 것으로,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운동과 더불어서 더 힘차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혜영 민주노동당 전 충남도당 위원장

“강령 후퇴는 진보대통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의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은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당의 정체성을 바꾸면서까지 당 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것이고, 또 하나는 논란이 많았던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당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은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에 간신히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긴 했지만 이런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어,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을 앞두고 당 강령 개정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내에서뿐 아니라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진보신당, 민주



노총, 진보교수연합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진보대통합 정당의 강령을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개정된 민주노동당 강령’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될 것이다. 당 지도부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개정된 당 강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강령, 무엇이 후퇴했나?

민주노동당의 새 강령을 이전 것과 나란히 읽으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25쪽에서 5쪽으로 분량이 줄었거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 문구가 삭제된 것만이 아니다. 노동·계급·제국주의·성소수자 문제를 비롯해 보수정당과 구분되는 주요 항목의 내용이 모두 후퇴했다.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며, “노동자와 민중이 ...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고,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노동자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새 강령에선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완수”라는 목표는 사라졌고 여러 부문 중 하나로 노동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이전의 민주노동당의 포부는 “노동 존중사회 실현”으로 대체됐다. 사회의 주인이며 투쟁의 주체로 났던 노동자를 종종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상당수 노동조 활동가들이 “누가 만든 정당인데 묻지도 않고 바꾸느냐”며 분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체에서 대상으로

소수자 억압 문제에서도 새 강령은 후퇴했다.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 정당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던 내용이 “성 소수자 등의 인권 향상에 노력”한다고 바뀐 것이다. 국민참여당 강령의 “성 소수자 등 ... 은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인다.

반제국주의 문제에서도 후퇴했다. 기존 강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제국주의적 이해를 위한 도구”인 UN 등을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 강령은 이것을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로 바꾸어서 평화체제를 위한 선결적 과제였던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 구축 이후 순위로 돌렸다.

결국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옛 강령의 급진성을 빼고 전반적인 후퇴를 감행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할 강령”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당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정종남



6월 19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후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당원들 30퍼센트의 대의원들이 강령 후퇴를 반대했고, 당대회 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령 후퇴의 정치적 배경

이번 강령 후퇴는 기존의 좌파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중도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은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 강령’은 아니었다. 가령,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고,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한다는 내용 등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고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뜻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존 강령에는 급진적 요소들이 심어져 있었다. “사적 소유의 종쇄로부터 ... 해방”,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 등이 그런 요소였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강령의 급진적 내용을 충실하게 실천에 옮기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당명에서 ‘노동’을 삭제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강령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8년 분당 때도 일부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하고 ‘국민정당’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당에 강요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다함께 등 당 안팎의 좌파와 당원들의 반발로 그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분당 사태 때는 우파 정부의 집권이 낳은 사기저하 속에서 당 지도부가 우경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선거 패배와 레임덕 속에서 진보개혁 대중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대체로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수동적 급진화로 나타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정권교체와 ‘집권’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동맹하고 당의 정체성을 후퇴시키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강령 후퇴를 통해 ‘함께 집권’해도 자본가들의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했다. 자본가 계급 일부와 민주당을 안심시켜야 집권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연상시키는 ‘종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득과 실

물론, 이처럼 진보정당의 강령과 성격에서 급진성을 탈색하고 자본가 정당과 손을 잡으면, 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양보를 얻어 당선에 유리할 수도 있고, 공동집권 등에도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그렇게 당선·집권하면 진보적 정책과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강령의 후퇴가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크고, 전체 계급세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삭제된 요소들은 자본가 정당과 노동자 정당을 구별해 주는 표지이자,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잖은 노동 활동가들이 강령 후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반대로, ‘강령 개정’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다. 이들은 가장 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강령을 버렸으니, 다른 좌파들도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따위는 버리라’고 충고할 것이다.

이처럼 강령의 후퇴는 명백히 우파의 기세를 드높이고, 반대로 노동운동과 좌파의 입지를 좁히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강령 후퇴는 영국 노동당의 당헌 4조 삭제와 비교할 만하다.

1950년대 노동당이 선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참패하고 노동계급의 사기가 떨어진 틈을 타, 노동당 당수인 휴 게이즈컬은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내용을 담은 당헌 4조를 삭제하려 했다. “공공 소유”에 집착하면 표를 잃는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그러나 이 시도는 좌절됐다. 당헌 4조는 ‘노동당이 최소한의 반자본주의 태도를 고수한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이즈컬이 당수가 되도록 지원한 노조 상근 간부들조차 게이즈컬의 시도에 반대했다.

1992년 총선 패배 후, 신자유주의에 타협한 토니 블레어는 당수가 되자마자 당헌 4조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다. 노동조합 당원들은 당헌 후퇴에 부정적이었다. 노동당 지도부는 온갖 책략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투표 지분을 줄였고 그런 후에야 당헌 4조를 폐지할 수 있었다.

최미진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뒤로 가는 것은 노동자의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강령 개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대회 때 강령 개정 찬성 발언자가 한 명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고 실망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통합 정당 건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원칙이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더 진보적인 지향을 밝혀야 새로운 당을 공고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당은 노동자 대중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강령과 당 운영도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비정규



직 길을 묻다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자는 모두 명망가 중심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 길을 묻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통합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등 소외받는 노동자,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석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

“인권과 소수자 문제에서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번 새로 강령이 사회주의 강령 삭제와 더불어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도 그 전 강령에 견줘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강령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몇 차례 제시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아무런 소통의 절차도 갖지 않은 이번 강령 개정은 죽은 강령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정책당 대회를 보면서 성소수자 당원들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다. 사회주의 강령 삭제와 인권의 후퇴가 단지 강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문제도 언젠가는 ‘집권에 방해된다고 하면서 삭제하자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등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해 온 민주노동당의 그 정신과 열정의 후퇴에 맞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김성락 기아차지부 지부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회주의 지향을 복원해야”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는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19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선 대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본가 정당과 타협하면서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자신의 태생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의 투사들에게 심각한 불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우리는 중동민중의 혁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강령을 후퇴시



키는 것은 현실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보대통합당의 강령을 만들 때, 사회주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장의 투사들과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새 강령 채택, 그 의미를 곱씹다

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 만든 기존 강령을 6월 19일 정책당대회에서 폐기하고 성격이 다른 새 강령을 채택했다. 즉,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이다.

명백히 새 강령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개정”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폐기”나 “대체”라는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워 “개정”이라는 부정직한 용어를 썼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기존 강령의 어떤 구절이 새 강령에서는 어떻게 바뀌었거나 삭제됐는지를 당대회 자료집에 전혀 명기하지도 않았다. 논란이 될 만한 ‘개정’ 내용이 두드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였겠지만, 설사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해도 개정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 폭이 워낙 전면적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강령과 새 강령 사이의 핵심적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문제**다.

기존 강령에는 이렇게 돼 있다.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반대로 새 강령은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한다고 했고, 해설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본 원칙의 이런 후퇴는 새 강령이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곧,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 비전을 폐기한 것은 **중대한** 후퇴다. 그것은 창당시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당들과는 다른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임을 선언한 상징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회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말이다. 세계적으로도 그것은 대중적 개혁주의 정당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지난 1995년 토니 블레어가 영국 노동당 당헌 4조(생산수단의 공공 소유 조항)를 폐지했을 때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창립자 토니 클리프는 그것이 “개혁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려는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블레어는 노동당 전통을 오른쪽에서 공격했던 것이다.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이변에 사라진 기존 강령의 좌파적 요소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노동자 정당”의 중요한 상징이었다.

물론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가 곧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인 것은 아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에서 국유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본가 계급을 정치적으로 패퇴시키고 생산수단을 장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기존 민주노동당 강령이 진정한 사회주의 강령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방어할 가치가 있었다. 1987년 노동자 투쟁 이후로도 10년 넘게 자본가 정당에 기대던 노동조합들이 2000년 독자적인 정당을 새로 만들고 좌파적 개혁 강령을 내건 것은 큰 진보였다. 그것은 남한 사회의 왼쪽 이동을 뜻했고, 노동자 정당이 나 진정한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도 더는 극소수 종파들의 관심사가 아니게 됐음을 뜻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런 점이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협소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즉, 노동조합 기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급 정당”이 아니라 “다계급 대중정당”으로 변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좌파적인 강

령도 속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등 자본가 정당들과의 동맹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들을 향한 일종의 약속인 셈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새 강령이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정권 형태”가 “계급 연대연합 정권”이고, 이 정권에 “자본가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며 “자본가들의 생산수단 및 생산활동을 보장”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동시에 “낡은 정치경제 구조를 철저히 타파”하겠다는 개혁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스스로 손발을 묶고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민주노동당의 오랜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와 견해가 다른 경우가 꽤 있다. 특히 노동조합 상근 간부이거나 그 출신인 지도자들의 일부가 그렇다.

이들은 1997년 1월 총파업 이후 노동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강력한 노동자 정당이 의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장본인들이다. 만약 노동자들의 정당이 있다면 계급투쟁에서 정치성을 제거하고 그것을 통제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그들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을 너무 온건하게 변화시켜 노동자들의 기대를 모으지 못한다면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저항을 체제의 틀 안에 가둬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현장의 직접적인 압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는 달리, 가까이서 노동자 대중을 다뤄야 하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일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오른쪽으로 너무 멀리 나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우려할 만하다.

몇 가지 쟁점

민주노동당이 새 강령을 채택한 것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곱씹는 것은 패배한 투쟁의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 기존 강령 수준의) 좌파적 강령을 채택하도록 더 잘 투쟁하기 위해서다.

사실,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반대 운동을 면밀하고 수미일관한 분석에 기초해 치밀하게 전개하지 못한 면

이 있다. 오류에서 배우면서 분석을 보강해야 할 쟁점을 몇 가지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단지 강령 ‘개정’이 아니라 기존 강령을 버리고 새 강령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어야 했다. 한두 구절의 문제가 아니라 강령 전체가 동맹 대상인 자본가 계급 정당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다함께가 마치 특정 구절 삭제만을 문제 삼는 듯한 인상을 풍겼고(심지어 운동 과정에서 이런 명시적 표현도 사용됐다), 상징적 문구 하나(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를 되살리면 새 강령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내부에서 자라났다.

둘째, 강령의 성격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했어야 했다(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을 사회주의 강령으로 보거나 새 강령을 NL 계열의 스탈린주의 강령으로 보는 관점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인식상의 혼란과 모호함이 있었다.(이런 혼란은 다함께가 발행한 소책자 <왜 “사회주의” 구절 삭제를 반대하는가>에 잘 드러나 있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이 사회주의 강령이 아님에도 사회주의자들이 강령 ‘개정’을 반대하고 기존 강령을 방어하는 일의 의의를 명확하게 이해했어야 했다. 이 점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 보니 자기중심적인 논리들을 앞세운 나머지, 그만 기존 강령을 다양한 이유에서 방어하는 세력들을 충분히 규합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는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우경화시키므로 전투적 노동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좌파의 입지를 축소시킨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모두 개혁주의 강령인데 굳이 기존 강령을 방어할 의미가 있느냐거나, 민주노동당은 이미 새 강령대로 실천해 오지 않았느냐거나, 민주노동당의 우경화가 좌파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오불관원하는 태도의 약점도 제대로 찌를 수 있다.

여기서 더 많은 쟁점들을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 제정에 심각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투쟁의 과오를 곱씹으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차베스, 한국의 해방 정국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

이번 강령 후퇴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차베스와 한국 해방 정국의 사례 등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든다.

“차베스도 집권하기 전까지 사회주의 얘기 안 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 것이다”는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의 주장에는 ‘사회주의’가 득표에 도움이 안된다는 선거주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몇몇 지도자들이 도입하는 것이라는 엘리트주의도 드러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식 혁명’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전에는 숨겼다가 집권 후 사회주의로 나아가기로 한 차베스의 결정 때문이 아니었다. 차베스의 개혁에 반발하며 베네수엘라 우익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분출한 빈민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차베스를 구하며 ‘볼리바르식 혁명’이 시

작된 것이다.

게다가 사적 소유와 자본가 계급을 인정하지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차베스의 경험에서 오히려 위험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산업과 언론은 여전히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차베스 정부는 식품 부족과 물가 상승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연계된 자본가들은 호시탐탐 반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는 노동자·민중 운동을 발전시키기보다 대기업들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부패한 자본주의 국가 기구의 수장으로 발목이 잡혀서 혁명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방 정국

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해방 정국에서 좌파들이 추구했던 것이고 반제국주의 노선이었다며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옛 형태인 좌우합작론과 민족통일전선론은 해방정국에서도 계급투쟁을 억제한, 실패한 노선이다.

당시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은 노동자들에게 “양심적 민족자본가”와 협력해 생산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의 공장자주관리운동과 농민들의 토지 접수 시도를 제지했다.

이런 틈을 타 우익은 세력을 결집시켰고, 친일 반동 세력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미군정은 각종 노동자·민중 조직을 파괴할 수 있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제국주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조선공산당은 해방 직후에 소련군만이 아니라 미군을 “해방자”로 환영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최종 결렬됐을 때, 공산당은 뒤늦게 투쟁에 나섰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후였다.

강동훈

민주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강령 변경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번 새강령 채택은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 힘들다.

한성우 중앙위원이 지적했듯이 “6월 4일 중앙위원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다뤄진다는 사실은 겨우 1주일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그조차 안전지는 당 웹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았다.

3차 중앙위원회에서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진 터라 4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지도부의 의사 진행에 적지 않은 중앙위원들이 당황했다.

6월 19일 정책당대회에서도 지도부는 왜 대의원대회 안

건을 일주일 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냐는 물음에, ‘회의 자료에 이미 그 내용이 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점심 식사 시간도 제공하지 않으며 대의원대회를 진행한 것도 사람들을 지치게 해 강령 개정 찬반 토론을 빨리 넘어가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당내 이견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토론도 회피한 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통합 진보 정당에서 패권주의를 막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장호중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퇴하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강령을 후퇴시키면서 당원이나 국민의 “눈높이”를 핑계로 댔다.

그러나 강령이란 것이 현재 대중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 아니라 그 당이 지향하는 미래의 대안 사회 체제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만 떠올려 보더라도 이들의 변명이 군색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강령이 대중의 정서에 당장은 부합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전술과 정책을 제시해 대중을 끌어당기려 노력해야지 원칙을 후퇴시키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상당수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당선이나 한나라당의 집권 연장을 저지하려면 민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진보정당이 더 온건해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령 후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당원조차 다가올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지지율과 의석수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야권연대와 강령의 온건화로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조차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닐 텐데,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모순은 계속된다. 순전히 선거 측면에서 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위해 민주당이 우세한 곳(예를 들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게다가 야권연대는 진보정당의 주장과 실천을 민주당 수준으로 낮추게 만들 것이다. 이미 지난 재보선 때 ‘야4당 정책연합’에서 진보정당들은 ‘FTA 폐기’가 아니라 ‘재검토’, ‘핵발전소 폐쇄’가 아니라 ‘재검증’으로 후퇴하며 민주당과 타협했다.

최근에는 전복버스 파업 탄압이나 FTA, 반값등록금, KBS 수신료 문제에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대중을 진보적 대안으로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야권연대와 강령의 온건화를 통해 집권에 가까이 다가갈지는 몰라도, 진보정당의 원칙과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집권을 통해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목표를 흐리게 되는 역할을 초래한다.

진보정당은 집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서 민주당·참여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투표의 가능성까지 닫아 둘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계급연합을 하고 강령까지 후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보정당이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확대하려면 민주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을 분명히 주장하고 운동을 건설해 계급투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국회에 진출했던 2004년은 탄핵 반대 투쟁으로 사회적 급진화가 이뤄졌던 때였다.

강동훈



6월 1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장에서 열린 강령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눈높이’를 핑계로 진보정당의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급진 좌파도 회피하지 말고 뛰어 들어가야

일부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악에 반대하는 캠페인 건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차피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사회주의 강령을 가진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원래 강령에 있던 내용들이 아래로부터 노동자 권력을 뜻하는 진정한 사회주의는 아니었다. 대체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강령’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까지 가진 대중 정

당의 강령에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은 노동운동과 좌파에게 도움이 됐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극소수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급진적 주장과 대안을 제시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민노당은 국내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도권] 정당”이라며 불편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상징이 제거되고 후퇴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좌파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급진적 강령을 버리면서 그 왼쪽의 좌파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 그러

나 이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물론 극소수는 강령 개악에 실망해서 민주노동당을 이탈하고 급진좌파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에 실망해서 사기저하하고 의기소침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진 좌파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악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더는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강령이 바뀐다고 민주노동

조준호 의장 유감

이번에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을 맡았던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정’을 도왔다.

그는 강령 후퇴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대의원들에게 들어가고 종용하는가 하면 강령 개정 찬성 발언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반대 발언 기회를 차단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을 줄이거나 의장의 통제를 따르라는 등 계속 강령 개정 반대 파들의 주장에 판죽을 걸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과정에 일조했다.

한탄스러운 것은 그가 한때 전해투(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하며 전투적 노동운동의 상징으로서 많은 투사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전투적 투사로서의 활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곧 온건한 노조 간부로 변신했고 2006년 민주노총 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협상 테이블만 기웃거리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 조 전 위원장의 궤적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변혁적 정치가 결여된 채 현장에서 전투적 투쟁만 강조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 정치의 공백은 얼마든지 우파적 개혁주의가 메울 수 있고, 협상 전문가로서 노조 상근 간부의 위치는 그런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법이다.

장호중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6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00년 창당 때 만들어진 강령을 전면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강령을 내놓았다. 새 강령은 3분의 2를 가까스로 넘겨 통과됐다.

그러나 강령을 둘러싼 투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새 강령을 새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을 제정할 때 민주노동당의 안으로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통합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광범하게 단결해 새 정당의 강령이 민주노동당의 새 강령 수준에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신문의 다른 기사들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새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 문제는 단지 사회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운동과 진보운동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새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이 분명한 진보 강령이 되기를 원하는 광범한 세력과 개인들이 단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강령을 통과시키려 했던 듯하지만, 대의원 30퍼센트가 새 강령을 반대했다는 사실은 광범한 단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금 노동자 운동과 진보 운동 내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적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운동의 지향과 인식의 지평을 협소한 민주주의 수준으로 한정해 뒀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수증기처럼 증발되지 않고 개혁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우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으려면 모종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동당 창당의 핵심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간부들 상당수가 창당 강령의 폐기에 매우 비판적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이런 기류를 사전에 인지했었던 듯하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도 동맹경화증에 시달렸던 당의 구조는

분당 이후 노동조합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노동조합과의 최종 결별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 당원들의 활동이 마비되면서 노동계급의 압력에 훨씬 더 둔감해졌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영향력 전달 통로가 위축되면 지배계급 사상에 더 쉽게 굴복하고, 그래서 다시 노동계급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리 되면 대대적인 우경화가 더한층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의 비판적 목소리의 결집은 개혁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우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새 통합 진보 정당이 좀더 노동계급 중심성에 근거하게 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적 후퇴는 우경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끝없이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새 통합 진보 정당을 “진보정당 독자적 생존력 확보”보다 민주당과의 동맹을 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새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을 둘러싼 투쟁은 이런 개혁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우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

김인식



모두들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포럼
말시즘 2011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시즘 2011

변 · 혁 · 이 · 나 · 야 · 만 · 이 · 나

7월 21일(목) - 24(일) | 장소 : 고려대학교 | 주최 : 다함께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 010-4909-2026 | marxism2011@marxism.or.kr | 트위터 : @marxismtwit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arxism.or.kr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연사들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연사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연민대학교 경제사상사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국내 내셔널책은 (무니지는 환상), 《반자본주의 선언》 등 수십 권이 있고, 특히 《갈 밭의 혁명적 사상》은 대학생들이 세미나 교재로 애용해온 스테디셀러다. 올해 방한에 맞춰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원제)》가 출판될 예정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레이경 동성애인권연대 활동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위원	원옥금 전주교의정부교구 이주센터 베틀님 여성 활동가	정종진 진보시장 '세로'진보청년 진선 추진위원회 위원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교수	윤도현 《한국의 복지동향》 공저자	조한정 한민교당 담임목사, '예수살기' 공동대표
김수형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국내에 (자본론) 한역 소개	이승훈 노동인권연대 정책국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공동 편집자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발행인	이영주 전 진로조 서울시부 수석부위원장	하종강 서울경기인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호 전 진로조 전북 지부장	이종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
김지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홍미정 전국대학교 중등연구소 연구교수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공동 편집자	이호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전지훈 《레프트21》 편집자	
여경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교수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의회 정책위원		

70가지 알짜 주제의 포럼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강연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강연, 놓치기 마세요

-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
- 유럽의 건축과 저항 (개막 연설)



아랍 혁명과 경제 위기의 세계적 파장

- 아랍 세계를 뒤흔드는 혁명
 -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홍미정, 김용욱
- 슬라니나는 세계 곳곳의 저항
 - 유럽의 건축과 저항 (개막 연설), 알렉스 캘리니코스
- 중국의 저항운동
 - 아랍 혁명 이후 중국에도 봄은 오는가? - 김용욱
- 미국의 노동자 투쟁 - 과거와 현재 - 한규환

2012년 총선·대선과 좌파

- 진보대통합과 야권 연대
 - 진보대통합의 쟁점과 전망 - 정성희, 정종진, 김인식
 - 인민전선, 진보 집권전략, 대중운동 - 최영준
 - 통합 진보 정당 강령에 사회주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패널 토론
- 북자국가 논쟁
 - 북자국가 - 무엇이든, 어떻게, 누가? - 우석균, 윤도현 등
 - 무상의료의 이해와 진실 - 우석균
 - 유럽 복지국가들, 형상에서 위기까지 - 정호준

7월 21일 목요일

- 3:00 - 4:20
- 성형, 빗기, 색시 갑박 - 여성의 자신감이나 은폐된 성차별인가? | 3:00 - 4:30
여경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 빈곤, 실업, 위장무어 | 3:00 - 4:30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정종진 다함께 운영위원
 - 세계 경제의 중심이 중국으로 넘어왔는가? | 4:30 - 5:00
이창구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대학원 교수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5:00 - 5:30
김태현 다함께 활동가
 - 레닌과 당
 - 김태현 다함께 활동가
- 4:50 - 6:10
- 일본발 핵 재앙 - 핵발전은 불가피한가? | 4:50 - 6:20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정호준 《레프트21》 기자
 - 국공립대 법인화, 왜 문제이고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 6:20 - 6:50
최갑수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노동법학위원회 상임의장 등
 - 혁명 속의 여성들 - 파리 코뮌에서 이집트 혁명까지 | 6:50 - 7:20
이현주 《마르크스21》 편집위원
 - 미국의 노동자 투쟁 - 과거와 현재 | 7:20 - 7:50
한규환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대학원 박사과정
 -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 | 7:50 - 8:20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발행인
- 7:20 - 9:00
- 말시즘 2011 '변혁이나 아반이나' 개막식

7월 22일 금요일

- 10:00 - 11:40
- 왜 노동운동이 중요한가? | 10:00 - 10:30
하종강 전 한울노동운동연구소 소장
 - 일본 신화, 무너지는가? - 전후 일본 66년과 핵 재앙 | 10:30 - 11:00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
 - 12:00 - 1:20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 12:00 - 1:30
전지훈 《레프트21》 편집자 등
 - 뉴타운 사업 - 제2의 용산을 재촉하나? | 12:00 - 1:30
 - 오늘의 학생운동 | 12:00 - 1:40
학생 활동가 패널 토론
 - 금융화와 위기 | 1:40 - 2:10
이창구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대학원 교수
 - 역사유물론 | 2:10 - 2:40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발행인
 - 2:40 - 4:00
 - 위기의 한국 개신교, 무엇이 왜 문제인가? | 2:40 - 3:10
조한정 한민교당 담임목사, '예수살기' 공동대표
 - 변하는 동북아 질서 - 중미 신냉전으로 가는가? | 3:10 - 3:40
김어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 마르크스의 생태학 | 3:40 - 4:10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 스페인 혁명 75주년 - 1936년 스페인 혁명의 교훈 | 4:10 - 4:40
김문성 《레프트21》 기자
 - 소련 붕괴 20년 -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 4:40 - 5:10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 가인의 어깨 - 혁명가들과 그들의 사상
- 엥겔스의 생애와 사상 | 5:10 - 5:40
조소희 다함께 활동가
- 4:30 - 5:50
-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4:30 - 5:00
이정원 전 이주노동자 교육선전부장
원옥금 전주교의정부교구 이주센터 베틀님 여성 활동가
 - 여성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 5:00 - 5:30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 진보의 눈으로 본 생명윤리 | 5:30 - 6:00
최규진 보건 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의대 인문과학 전공자
 - 장하중과 발전국가 논쟁 | 6:00 - 6:30
강종훈 《레프트21》 기자
 - 사회주의의 전략 전술 - 공동전선을 중심으로 | 6:30 - 7:00
최영준 다함께 연대협력국장
- 가인의 어깨 - 혁명가들과 그들의 사상
- 트로츠키와 연혁혁명 이론 | 7:00 - 7:30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 7:00 - 8:50
-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 7:00 - 7:30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7월 23일 토요일

- 10:00 - 11:40
- 마르크스주의와 정의 | 10:00 - 10:30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 자본에 종속된 형벌권 - 현상과 논리 | 10:30 - 11:00
이호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교초기 교육학과 한국사회 | 11:00 - 11:30
전보선 전교조 교사, 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 12:00 - 1:20
 - 경제 위기와 인종주의 - 이주 신화 벗기기 | 12:00 - 1:40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승섭 전진노조 경기도건설자부 대의원
 - 위기의 20년, 북한은 어디로? - 핵무기, 권력 세습, 북중 협력 ... | 1:40 - 2:10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2:10 - 2:40
홍미정 전국대학교 중등연구소 연구교수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2:40 - 3: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3:10 - 3: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3:40 - 4: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4:10 - 4: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4:40 - 5: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5:10 - 5: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5:40 - 6: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6:10 - 6: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6:40 - 7: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7:10 - 7: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7:40 - 8: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8:10 - 8: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8:40 - 9: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9:10 - 9: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9:40 - 10: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10:10 - 10: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10:40 - 11: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11:10 - 11: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의 방법 ②
- 변증법 | 11:40 - 12:10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 2:40 - 4:00
- 김수형 교수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① | 2:40 - 3:10
김수형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국내에 (자본론) 한역 소개
 -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자 연대, 무엇이 할 것인가? | 3:10 - 3:40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의회 정책위원
박성환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 신자유주의와 대학 | 3:40 - 4:10
김지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
정진희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등
 - 무상의료의 이해와 진실 | 4:10 - 4:40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시장 없는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4:40 - 5:10
강종훈 《레프트21》 기자
 - 무상의료의 이해와 진실 | 5:10 - 5:40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시장 없는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5:40 - 6:10
강종훈 《레프트21》 기자
 -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중파업 | 6:10 - 6:40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
- 가인의 어깨 - 혁명가들과 그들의 사상
-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중파업 | 6:40 - 7:10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
- 4:30 - 5:50
- 김수형 교수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② | 4:30 - 5:00
김수형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국내에 (자본론) 한역 소개
 - 진보대통합의 쟁점과 전망 | 5:00 - 5:30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종진 진보시장 '세로'진보청년 진선 추진위원회 위원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발행인
 - 진보교육과 시대 교육운동 | 5:30 - 6:00
김정호 전교조 전북지부장
 - 유럽 복지국가들, 형상에서 위기까지 | 6:00 - 6:30
정호준 《레프트21》 기자
 - 인간본성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한가? | 6:30 - 7:00
정성영 《레프트21》 기자
 -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 7:00 - 7:30
박설 《레프트21》 기자
 - 7:00 - 8:50
 -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 7:00 - 7:30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7월 24일 일요일

- 10:00 - 11:40
- 과학에서 왜 창작 필요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 10:00 - 10:30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교수
 - 북자국가 - 무엇이든, 어떻게, 누가? | 10:30 - 11:00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윤도현 《한국의 복지동향》 공저자 등
 - 통합 진보 정당 강령에 사회주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11:00 - 11:30
패널 토론
 - 12:00 - 1:20
 - 경제 위기와 인종주의 - 이주 신화 벗기기 | 12:00 - 1:40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승섭 전진노조 경기도건설자부 대의원
 - 위기의 20년, 북한은 어디로? - 핵무기, 권력 세습, 북중 협력 ... | 1:40 - 2:10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2:10 - 2:40
홍미정 전국대학교 중등연구소 연구교수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2:40 - 3: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3:10 - 3: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3:40 - 4: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4:10 - 4: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4:40 - 5: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5:10 - 5: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5:40 - 6: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6:10 - 6: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6:40 - 7: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7:10 - 7: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7:40 - 8: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8:10 - 8: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8:40 - 9: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9:10 - 9: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9:40 - 10: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10:10 - 10: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10:40 - 11:1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11:10 - 11:40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의 방법 ②
- 변증법 | 11:40 - 12:10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 2:40 - 4:00
- 김수형 교수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① | 2:40 - 3:10
김수형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국내에 (자본론) 한역 소개
 -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자 연대, 무엇이 할 것인가? | 3:10 - 3:40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의회 정책위원
박성환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 신자유주의와 대학 | 3:40 - 4:10
김지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
정진희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등
 - 무상의료의 이해와 진실 | 4:10 - 4:40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시장 없는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4:40 - 5:10
강종훈 《레프트21》 기자
 - 무상의료의 이해와 진실 | 5:10 - 5:40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시장 없는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5:40 - 6:10
강종훈 《레프트21》 기자
 -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중파업 | 6:10 - 6:40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
- 가인의 어깨 - 혁명가들과 그들의 사상
-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중파업 | 6:40 - 7:10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
- 4:30 - 5:50
- 김수형 교수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② | 4:30 - 5:00
김수형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국내에 (자본론) 한역 소개
 - 진보대통합의 쟁점과 전망 | 5:00 - 5:30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종진 진보시장 '세로'진보청년 진선 추진위원회 위원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레프트21》 발행인
 - 진보교육과 시대 교육운동 | 5:30 - 6:00
김정호 전교조 전북지부장
 - 유럽 복지국가들, 형상에서 위기까지 | 6:00 - 6:30
정호준 《레프트21》 기자
 - 인간본성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한가? | 6:30 - 7:00
정성영 《레프트21》 기자
 -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 7:00 - 7:30
박설 《레프트21》 기자
 - 7:00 - 8:50
 -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 7:00 - 7:30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3:00 - 4:20

다른 학교는 가능한가? - 혁신학교 실험과 학교 혁신 운동

이영주 전 전교조 서울시지부 수석부위원장

구호, 봉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규진 보건 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의대 인문과학 전공자

성, 사랑, 가족

정진희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중국의 저항운동 - 아랍 혁명 이후 중국에도 봄은 오는가?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인민전선, 진보 집권전략, 대중운동

최영준 다함께 연대협력국장

마르크스의 방법 ②

소외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4:50 - 6:40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북카페

북카페에서 다양한 마르크스주의의 강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자 특별 할인 판매를 비롯해 각종 도서를 15~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놀이방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행사이틀에서 7월 17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장소 사정 상 인원 제한이 있으나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말시즘의 백미는 청중식 토론

국내에서 보기 힘든 민주적 토론을 즐기세요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셋,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 학생들만의, 노동자들만의 토론과는 색다른 경험, 함께 모여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넷,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식 토론 :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말시즘 2011만의 특징

하나, 70가지 알짜 주제 :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둘, 국내외 진보운동 연사들의 힘 있는 메시지 : 감동 없는 학술 토론이 아닌 실천과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보대통합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급진좌파는 진보대통합이 진보정당 상층 지도자들의 선거 책략일 뿐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또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도 속에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그 의의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은 단지 상층 지도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단결 염원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저지할 대안으로 진보정당의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바란다. 실제로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그 후 각종 노동자 투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과 연결시키는 것도 단지 상층 지도자들의 술수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라도 이명박을 물리치고 박근혜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급진좌파는 진보적 대안을 염원하는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진보대통합을 분명히 지지하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성문

물론 진보대통합을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보다는 선거에서 민주당 등과 동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현재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이정희 대표는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자리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 한다.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최근 ‘수권정당’과 ‘집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노동당(또는 통합 진보정당)의 단독 집권보다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가 ‘집권’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통합 진보정당에 참여당을 포함시켜 ‘몸집’을 키우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당은 현재 진보대통합의 기준으로 제시돼 있는 반신자유주의와 맞지 않다. 최근 유시민은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은 “합당”했다며 과거를 반성하라는 진보진영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 진보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구애

이 때문에 진보대통합을 위해 불출마 선언까지 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민주당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정권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다”며 참여당과 선을 그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참여당에 ‘구애’하는 것을 보며 ‘진보대통합보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관심있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진영의 단결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양당 대변인을 했던 손낙구 씨가 민주당 손학규 품으로 떠나간 것 같은 일도 반복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결코 믿을 만한 동맹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에도 한나라당과 손잡고 검찰 개혁 포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KBS 수신료 인상안 합의 등을 시도한 바 있다. 민주당 손학규가 이명박과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었다.

최영준



6월 11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최종 합의문 선포식 단결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대연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는 대중과 소통하기 힘들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유시민을 진보로 포장하지 말아야

7월 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진보정치캠프에 참여당 대표 유시민을 연사로 섭외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학위장과 부산학위장, 충남학위장 등이 유시민 연사 섭외를 반대했는데도 전국학생위원회(이하 전국학위) 위원장을 비롯한 학생위원회 지도부의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유시민을 연사로 세우려는 계획을 밀어붙인 것이다.

충남학위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때 비정규직법이 통과됐고, 대학생들도 힘들었다. 반민주·반민중적인 행각을 한 세력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고 옹기 지켰다.

그러나 전국학위 지도부는 ‘참여당이 기준에서 부족하다면, 그것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의 넓은 행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또 ‘유시민은 대선 지

지를 3위다. 유시민과 적극적 행보를 하면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실용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진보신당과 깨지는 것을 왜 우려하나?’라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자본가 정치인과의 동맹하려고 무원칙한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진보진영의 분열까지 방조하는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은 참여당의 평당원과

지지층을 단순히 내치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2008년 촛불 이후 급진화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진보진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보진영이 단결과 투쟁 속에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참여당 지도부를 진보로 포장하면서 계급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정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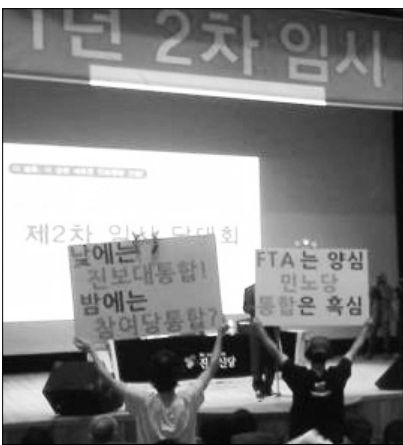
진보신당의 분열과 진보대통합의 미래

6월 26일 진보신당 당대회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의 최종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신 ‘합의문을 인정하고 수임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2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상 쟁점은 ‘합의문에 대한 이견,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 패권주의 극복, 당명과 강령’ 등이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진보신당 통합파와 독자파 일부가 가까스로 봉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앞길은 여전히 어둡다. 우선, 통합파와 독자파 일부가 연합했는데도 합의문 승인을 위한 대의원 3분의 2 수준에는 못 미쳤다. 강경 독자파는 당대회 내내 반발했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통합파와 독자파 사이의 감정의 골은 풀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는 진보대통합을 주도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는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 계속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민주당 등과의 계급연합)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이정희 대표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참여당까지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 하면서 진보신당 독자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했다.

진보신당 통합파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진작부터 연립정부를 구성해 왔고 노회찬 전 대표도 당대회 다음 날 ‘참여당도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진보 양당 당대회에 모두 초청받아 “동지가 되면 좋겠다”고 추파를 던졌다.



양당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독자파의 반발을 자초했다.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신당 당대회 결과를 두고도 합의문을 승인하지 못한 것만 부각하고 있다. 이것은 ‘진보신당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못했으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을 이후 함께 할 동반자로 여기는 게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논평했다.

결국 진보진영의 단결을 해치면서까지 야권연대, 연립정부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진보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의의가 훼손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진보대통합이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보신당 독자파의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도 옳다.

노동자 계급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진보신당 독자파가 진보대통합을 사실상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진보대통합을 ‘도로 민노당’이라고 부르

는 강경 독자파 일부는 당대회에서 “민노당, 진보정당 아니잖아?”라는 팻말 시위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명백히 노동자 진보정당이다.

독자파가 야권단일정당론자인 복지파와 동맹해 합의문에 반대하는 것도 무원칙한 태도다. 이것은 독자파의 계급연합 반대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강경 독자파의 리더인 장혜옥 전 교조 위원장이 “통합 동지들에게는, 민노당으로 돌아가, 참여당과 어울려서, 민주당과 연합하는 수순이 쭉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다하다. 그것은 결정돼 있지 않다. 더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옳다.

사실 최근 김현우, 장석준 등이 독자파의 ‘깃발’로 제시한 여성, 생태, 비정규직을 위한 ‘녹색사회당’ 노선은 이미 3년 전 진보신당 창당 때 제시됐던 것이다.

더구나 그 내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김현우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천만 노동자 총단결은 불가능하며 노동계급은 하나가 아니”고 “계급을 12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조직 노동자”의 “보수화 경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운 주체로 제시한다. 나아가 “임금인상하고 근로조건 개선하는 것으로 노동해방은 오지 않았다”며 “더 적게 만들고 더 적게 벌어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보다는 그것을 해체시키는 주장이다. 남종석 진보신당 부산시당 동래·연제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의 비판처럼 “노동자계

급이어 안녕’을 위한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듣고 있으면, 독자파들이 민주노동당 시절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인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탈당할 때 “민주노동당”을 비난하던 것이 떠오른다.

자본에 맞서는 정당은 단지 ‘비정규직당’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하는 노동계급 정당이 돼야 한다. 또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을 지지하면서 그 힘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좌파는 조직 노동자에 기반을 둔 통합 진보 정당의 건설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통합 진보 정당의 우경화를 방관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차별성을 내세울 기회로 여긴다면 종파적 태도일 것이다. 그 점에서 통합 진보 정당 안에서 별도 조직을 유지하는 대신 통합을 승인하자는 진보신당 김종철 전 대변인의 제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진보신당의 좌파들은 민주노동당 자주파에 대한 경경심과 반감이 아니라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을 급진화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진보대통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 대중이 지지하는 진보대통합 과정에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계급연합 노선과 싸워야 한다.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 진보 정당 안에서 좌파 블록을 구성해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의 좌파적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악에 반대한 3분의 1의 목소리는 이러한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김문성

서울대 점거 투쟁이 보여 준 교훈과 과제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 점거 투쟁이 아쉽게도 6월 26일 해제됐다.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며 점거를 정리했다.

지난 28일간 점거 투쟁이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2천3백 명이 모인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점거 투쟁은 놀라운 활력과 능동성 속에서 유지됐다. 모금과 물품 지원도 1천5백만 원 넘게 되는 등 사회적 지지도 받았다.

무엇보다 이 투쟁은 법인화가 대체처럼 여겨지던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본부 점거 기간 동안 경북대가 법인화 추진을 중단했고 부산대도 법인화를 반대하는 총장이 당선됐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점거장을 열리게 지켰던 많은 학생들은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를 해체하지 못하고 점거를 풀어야 하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

설준위를 해체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버티는 학교에 맞서 법인화를 중단시키려면 끈질기게 투쟁을 유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학교와 학생들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은 부적절한 타협을 중재하려 했다. <한겨레>도 민주당의 타협안을 학생들의 요구인 양 보도하며 은근히 타협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총학생회는 안타깝게도 투쟁을 확대하려 하기보다는 학교와의 협상에 말려들어 갔다.

동력

한 서울대 한기연 활동가는 6월 중순에 좀더 많은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총학생회가 “그런 사업을 진행할 동력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총운위에서는 “이미 본부와 합의 협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점거 농성장을 떠나는 학생들이 생겼다.

총학생회와 다수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동력”이 줄어서 힘들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학교와의 협상에 치중한 것이 동력을 갉아먹은 것이다.

총학생회와 다수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설준위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6월 11일 국공립대 법인화 종단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행동 본부 점거에 열의있게 참가한 사람들로 점거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

본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대 국회 투쟁에 집중하자고 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인화 법을 폐기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공을 국회로 넘기며 학교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가 된 것이다. 서울대 본부는 엄연히 설준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인데 말이다.

더구나 본부 점거를 유지하고 학교 당국에 맞서 힘있게 싸울 때 대 국회 투쟁도 더 효과적으로 벌일 수 있었다. 이미 지난해 법인화 법 폐기 안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도 되지 않다가 점거가 벌어지자 논의가 시작된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좌파인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 활동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진지하게 대학 기업화를 반대해 왔던 행진 활동가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학생들의 의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한 요소였던 것 같다.

실제로 총학생회 활동가들은 총회가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총회

성사 후에도 곧 동력이 줄어들 테니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법인화 반대 투쟁에 대한 혼란된 생각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올해 초 행진은 법인화 법 폐기는 “결과에 대한 투쟁”에 머무를 뿐, ‘원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적”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학생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행진이 학생회라는 틀에 얽매어 대다수 학생회장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전제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이번 점거 투쟁에는 학생회 활동가가 아닌 학생도 열의있게 참가했다. 이들은 자신을 ‘원자’라고 불렀는데, 마지막까지도 30여 명의 ‘원자’들은 본부를 지켰다. 하지만 이들은 총운위가 학교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점거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갖지 못했다.

점거 농성자 전체 토론에서는 점거 유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전학대회에서 점거 해제가 결정됐다.

“점거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는 의지도 동력도 있다. 점거 계속하자고 외치고 있고 밖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다 너네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만 해라’고 하는 별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죠.”(점거에 참가한 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글)

한 학생은 게시판에 “화가 나는 것은, 일부 대의원들은 자신이 싸우기 싫단 이유로, 타인의 싸움 권리마저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올렸다.

전학대회에서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점거 해제를 주장했다.

“학생회는 단순히 투쟁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있다. 점거 상황 때문에 학생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저희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나 농촌봉사활동 등이 미진하다.”

실제로 요즘 학생회는 운동 단체의 성격과 복지 제공자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두 가지 중 복지 제공자의 성격이 학생회 활동을 압도하기 쉽다.

또 학생회는 일상적인 시기에 평균적인 학생들의 의식을 반영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투쟁을 통해 급진화가 됐을 때 그런 의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따라서 만약 학생회가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투쟁 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 학생회가 투쟁을 열의있게 이끌 때도 능동적인 학생들을 포괄하는 더 개방적인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올해 고려대에서도 총장실 점거를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던 중앙운영위원들이 2차 총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점거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화여대와 한국외대에서도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모인 학생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투쟁을 접는 구실을 했다.

반대로, 지난해 영국에서 등록금을 세배 인상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점거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점거를 주도한 것은 학생회가 아니라 점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이었다.

이번 서울대 점거 투쟁에서도 투쟁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로 점거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행진 활동가 등 이 투쟁의 승리를 바랐던 투사들은 학생회 틀에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전진시키려고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 투쟁의 초반에 나타났던 정치와 조직에 대한 자율주의적 거부감을 약화시키며 왜 급진적 정치와 조직이 운동의 발전에 필요한지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 종단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이렇게 말했다.

“점거를 한 학생들 정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법인화 반대 투쟁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후반으로 갈수록 위기가 커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 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학대회에서 6월에 대 국회 투쟁을 벌이고, 9월 개강 총회, 동맹휴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투쟁의 경험을 잘 일반화해 후시 있을지 모르는 학교의 보복에 대응하며 법인화 법 폐기 투쟁을 이어나가자.

정선영

반값 등록금 쏙붙은 왜 커지지 못하는가?

성지현

반값 등록금 쏙붙이 켜진 지 한 달 만에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률을 30퍼센트까지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값 등록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정부와 협의도 안 됐고, 재원 대책도 없고, 사업대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기만일 뿐이다.

민주당은 2012년에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수회담에서 손학규는 이명박에게 아무런 약속도 받아 내지 못했다. 한대련의 지적처럼 “민나서 아침밥 먹은 일밖에 없다.” 이 투쟁을 대표해서 담판이라도 지을 것처럼 폼을 잡았지만 싱겁게 마무리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도 사학 재단, 국공립대 운영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운동의 압력과 2012년 선거를 의식해서

한 약속을 과연 지킬지 썩 미덥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권이 이런 생색내기 방안이라도 내놓도록 강제할 힘, 바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제2쏙붙이’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반값 등록금 운동은 안타깝게도 6월 10일 이후 심화·발전하지 못하고 집회 주최측도 인정하듯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폐쇄적

그러나 이것은 필연이 아니었다. 운동이 더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한대련 지도부가 대중의 자발성을 고무하며 운동을 확대하기보다는 국회에 대한 압력 수단 정도로 운동을 스스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로만 폭을 좁히지 말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기되는 주요 요구와 투쟁들을 연결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게 필요했다. 이를 위해 공동 투쟁 기구도 필요했다.

그러나 한대련 지도부와 등록금넷 일

부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통제 아래 운동을 폐쇄적으로 조직했다.

한대련과 등록금넷이 최근 집중해서 조직한 것은 ‘1천 인 원탁회’였다. 원탁회의 결과는 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만이 아니라, “점진적인 무상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한대련의 평가는 과장된 감이 있다. 사실 이미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투쟁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지, 요구 수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한대련 지도부의 이런 활동 방향은 국회에서 다루기 적당한 정책 묶음을 제시해주는 데 주력하는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등록금넷 안전결 팀장이 등록금넷 내부 워크숍에서 국회 협상에서 등록금 인화가 정안 되면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를 물가인상률 정도로 맞추는 것도 의미 있다”며 양보안을 제시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등록금 내리랬더니 ‘구조조정하겠다’는 동문서답

이명박과 손학규가 영수회담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었다. <조선일보>와 같은 우파들도 지금 “등록금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인 과잉 대학과 잉여 대학생을 양산한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게도, ‘등록금 인하’ 요구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학생들을 공격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우선 등록금 문제와 ‘부실 대학’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보자. 이 대학들은 적립금 또한 엄청 높고, 아무도 이 대학들을 ‘부실 대학’이라고 하진 않는다.

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짓고 도서관 하나 번번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뺏아내는 파렴치한 사학재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 대학’을 퇴출하고 그 대학

학생들을 장학금과 등록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사립학교법대로 하면 학교가 문을 닫아도 오히려 재단은 재산권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아무런 피해 없이 학교 운영에서 손만 털면 그만이다.

국공립화

고졸자의 임금이 대졸자의 70퍼센트밖에 안 되고, 학벌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대학을 가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부실 대학’은 정부가 재단의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국공립화해야 한다. 이런 대안이 야말로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힘빠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

버락 오바마는 “전쟁의 물결이 잦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고비를 넘었고 미군이 7월부터 철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011년 말까지 1만 명이 철군할 것이고, 2012년 9월까지 3만 3천 명이 철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시종일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선택’ 전쟁이라 부르면서 ‘오바마의 전쟁’으로 만들었다. 그는 5만 3천 명을 증파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수를 10만 명으로 늘렸다. 또, 10만 명의 미국방부 ‘청부업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철군 계획이 시작된 후에도 조지 부시 때보다 더 많은 군인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을 것이다.

전쟁 종식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오바마는 미국인 과반이 이 전쟁에 반대하는 국내 상황을 신경써야 할 처지다.

이번 발표는 또한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력이 한계에 도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전쟁 경비로 1조 달러를 지출했다. 오바마는 국내의 ‘국가 건설’에 집중하려고 점령 규모를 줄이고 싶어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반복됐다. 그러나 탈레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민주주의, 여성해방, 부패 근절 등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해 온 온갖 고



〈뉴욕타임즈〉에 실린 사진

미국 점령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됐다.

상한 얘기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

최근 한 국제 조사는 아프가니스탄을 “세상에서 가장 여성이 살기 위험한 나라”로 선정했다.

불안정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패가 만연하다. 예컨대, 민간 소유인 카불 은행의 예금 8억 5천만 달러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카불 은행이 카르자이 정권 측근 인사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 준 부정부위와 연관된 것은 확실하다. 전쟁의 와중에서 아프가니스탄 민간

인 수만 명이 죽었다. 또, 미군 1천5백 명과 영국군 4백 명이 죽었다.

미군의 침략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핵무장국인 파키스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오바마 당선 후 미국 무인 폭격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인 2천여 명이 죽었다.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자, 파키스탄 내에서 파키스탄이 더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화됐다

〈뉴욕타임즈〉는 빈 라덴 암살 작전 직후 파키스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아라비아해의 전략항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그들은 송유관, 도로와 심지어 중국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이런 불안정성,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영구 군사기지 건설 계획, 지속되는 리비아 전쟁 등을 볼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서서히 종식시키겠다는 오바마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주디스 오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파병 한국군은 즉각 철수하라

올 들어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주둔 부대는 벌써 열 번에 달하는 로켓 공격을 받았다. 아직 사상자는 없지만 현지 사람들은 “탈레반이 정찰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한국군이 머물고 있는 파르완주에서는 최근 점령에 맞서는 주민들의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도 철군 계획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더는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인들과 한국 젊은이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철군해야 한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이번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령을 폐기하고 그것을 더 온건한 강령으로 대체하면서 사회주의가 하나의 이슈가 됐다. 그래서 영국 사회주의자 개리스 킨킨스가 진정한 사회주의를 설명한 글을 일부 다듬어서 다시 읽는다. 이 글은 〈맞붙〉 36호 (2007. 3. 24)에 실린 글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투쟁을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사회주의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회 질서가 공정한 미래 사회를 뜻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노동자 운동의 목표를 사회주의로 정의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와 빈민 다수의 대중 행동을 통해 ‘아래로부터’만 건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마르크스가 1852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했다를 때, 그는 스탈린이 1920년대에 소련에서 반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후 자행한 독재를 뜻한 게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말은 노동자들이 옛 착취 계급을 몰아내려면 자신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일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가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또 그래서서는 안 된다는 사상인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를 거부했다.

19세기 초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탁월하게 비판했을 뿐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무적인 비전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무기력한 희생자로 여겼다. 따라서 소수의 선각자들이 노동자들을 대신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의는 폭력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용하려고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계급투쟁을 표현한 것이다. 노동계급 투쟁이 완전히 성공했을 때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혁명 직후 무엇이 가능할지도 고민했다. 마르크스는 계급도 국가도 없고 인간의 개성을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협력적인 사회로 어떻게 나아가갈 수 있을지를 탐구했다.

국가와 혁명

마르크스는 승리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려받은 ‘노동의 성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서 시작했다. 사회의 총 생산물은 사회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노동자 국가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와 비교해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다. 개인과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 사이의 관계가 변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개인과 생산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들은 시장의 무게 확성에 종속되며,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이 먼저다.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으며, 생산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개인과 생산물의 관계는 직접적일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그들은 더는 임금을 위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사회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의 생산물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집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자본가 계급을 쫓아내야 한다. 자본가 계급을 권좌에서 밀어내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가 나타난 것처럼 혁명 과정에서 노동 대중이 자본주의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를 세워야 한다.

높은 단계

그러나 혁명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새로운 사회 건설은 그렇지 않다. 첫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은 훨씬 더 느린 과정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옛 관계들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사회 생산물에 대한 개인 지분 면에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거액 연봉”을 받지 못할 것이다. “거액 연봉”은 ‘노동’이 아니라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소득’으로 생산수단, 즉 착취 수단을 살 수 없다.

자본주의가 약속했지만 지키기 못한 진정한 평등이 처음으로 구현될 것이다.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따라 사회 생산물이 개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다.

이런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첫째, 자본주의에서 생산되는 온갖 낭비(무기 · 광고 · 경영)가 아니라 광범한 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할 것들(더 나은 주택 · 학교 · 보건)을

생산하는 데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너무 어리거나 늙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대거 재분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육 시설, 가족 수당, 연금, 질병 수당 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사회적 · 개인적 욕구에 맞춰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도 인간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풍요 덕분에, 생활 필수품을 둘러싼 개인 간 경쟁도 사라질 것이다.

경쟁이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역겨운 일들도 사라질 것이다. 한 사람을 평생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묶어 두는 분업과, 우리를 지리멸렬에 빠뜨리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사이의 분리도 종말을 고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이뤄지면 노동자 국가도 소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의 특징 중 강압이 사라지고, 어떤 형태의 국가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청년 마르크스는 더 고차원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모두에서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가 “전반적 생산을 규제하게 되고, 바로 이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하는 것, 사냥꾼도 어부도 목동도 비평가도 되지 않고도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를 치며 저녁식사 후에는 비평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개인의 전인적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며, 사회는 자신의 기치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반긴축 투쟁, 아랍 혁명, 그리고 좌파의 과제

다음은 최근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 (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관련한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 천경록이 수고해 썼다.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

파노스 가르가나스(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언론들도 그리스의 디폴트는 시간문제임을 인정하고 주변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신규 구제금융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구제금융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 구제금융의 조건에는 즉각적 사유화도 포함돼 있고, 이는 강력한 저항을 부를 것이다. 사유화에 맞서 전력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조만간 48시간 총파업도 계획돼 있다. 그 외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을 비롯한 여러 광장에서 점거 시위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살아남을지 불분명하다.

지난주 신임투표는 간신히 넘겼지만 이번 주 신임투표는 총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가 버텨낸다고 해도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 총력 동참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신타그마 광장을 사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경제 위기와 저항 속에서 정권이 붕괴됐던] 2001년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파업 물결 속에 정부가 붕괴하면 머지않아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거리의 분노를 노동자 투쟁과 결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보다 더 준비된 상태로 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슈테판 보르노스트(독일 마르크스21): 독일은 그리스 사태의 동전 반대면이다. 그동안 독일 지배계급은 유로존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얻었다. 임금억제, 수출 확대 등.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부담을 독일이 질 것인지 프랑스가 질 것인지를 두고 분열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스페인 등지에서와 같은 큰 저항은 없다.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저다. 지배계급은 어떻게든 그리스에 민영화를 강요해서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다. 가령 도이체 텔레콤이 그리스 전력공사를 인수하려 한다. 반면 독일 디링케(좌파당)는 훌륭하게도 그리스 부채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영국에서는 6월 30일 백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총파업이 계획돼 있다. 이것은 중요한 일보전진이다. 불행히도 일부 좌파는 ‘총파업 구호는 부적절하다. 지역적 대중 캠페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긴축에 반대하는 지역적 캠페인들을 노동자 파업과 대립시키는 것이다. 스페인 시위에서 나타난 노조에 대한 적대감은 이 중 극단적인 사례다.

파노스가 말한 ‘거리의 분노와 조직 노동자들을 연결시키기’라는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거리와 파업을 대립시키는 접근법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은 지난 10년 동안 조직 노동자들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 예컨대 2003년과 2007~8년 프랑스의 노동자 파업은 패배로 끝났다 — 부상한 대중 운동의 운동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 그리스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다. 영국에는 그리스인들이 많은데, 이번 화요일에는 그리스 대사관 앞에서 연대 시위를 할 것이다.

리처드 와이먼(캐나다 국제사회주의자들 IS): 5월에 연방 선거가 있었는데 보수당이 여전히 1위를 했지만, 캐나다판 노동당(신민주당 NDP)이 2위를 했다. 이전 선거보다 2백만 표를 추가로 얻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랐다. 캐나다항공의 승무원 파업이 벌어지고 있고 우체국 노동자들도 파업 중이다. 우체국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 단체들, 빈민, 노인 단체들의 연대가 활발하다. 즉 ‘거리 대 파업’이라는 대립 구도가 성립하지 않았다.

우체국 노동자들과 승무원들이 평조합원들의 발의로 서로 피켓 라인에 지지방문을 가는 보기 드문 연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NDP의 부상이 사람들의 누적된 불만을 분출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NDP는 동시에 우경화하고 있다. 최근에 지도부는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요소를 삭제하려 했다가 기층 당원들의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자유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도주의적 모습도 보인다. 곧 전국적 파업이 계획돼 있고 가을에는 주단위로 파업들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이를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알렉스: ‘거리나 파업이나’ 논쟁의 제기여부는 이전의 맥락에 달려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에 비록 짧았지만 학생 운동의 분출이 있었다. 2008년 말 그리스에서도, 최근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청년 운동의 분출이 있었다. 이들은 준 자율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정당 일체를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이 보이



6월 19일 스페인 전역에서 1백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는 연성 자율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연루된 기성 정당들을 거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좌파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거부하고 노조를 적대시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좌파 정당이 운동을 건설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에서 보여 줘야 한다.

파노스: 연성 자율주의가 그리스에서는 매우 강하다. 노조에 뿌리 내린 공산당이 광장 점거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광장 점거 운동의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노동 현장을 강조했다. 일리 있는 지적도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옳지만, 실천에서는 보수적인 종파적 대응이었고 결과적으로 좌파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다.

자율주의를 추수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운동에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당이나 노조를 거부하는 후진적 사상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를 추수하면 결과적으로 좌파가 주변화된다.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상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신타그마 광장 점거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대중의 현재 의식 수준은 한 달 전보다 몇 광년을 진보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문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팻말을 들지 말라는 논쟁도 있었고, 전력 노동자들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에 적대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에는 노조 대열이 광장에 행진해 들어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날 우리는 당 깃발을 든 채 경찰과 대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했다. 요컨대 우리는 종파주의와 추수주의 둘 다를 파하면서 개입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알렉스: 2주 전에 런던에서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가 개최됐다. 영국 SWP, 그리스 SEK,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포르투갈 좌파블록, 덴마크 적록동맹 등이 참가했는데 여기서 디폴트 문제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좌파블록은 디폴트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포르투갈 사민당이 좌파블록이 디폴트를 지지한다면 서 좌파블록을 공격했고(좌파블록이 실

제로는 디폴트에 대해 침묵했지만), 이때문에 좌파블록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자체 평가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디폴트 문제를 더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우파들은 그리스가 당연히 평가절하를 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우파들과 차별화된 디폴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파노스: 정당이 너무 좌경화하면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주장이 흔하다. 그리스의 시리자(급진좌파 연합)에서도 그랬다. 선거 평가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당내 우파가 탈당해서 나간다. 이런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논쟁을 통해 좌파가 강해질 수 있다.

아랍 혁명의 전진

알렉스: 최근 동지들이 카이로에 자주 다녀와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대중 동원 수준이 높다. 노조 조직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민주노동자당(DWP)도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당원 수가 3천 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이집트 상황은 뒤죽박죽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젊은 무슬림형제단원들은 상당히 운동에 친화적이다. 튀니지는 상황이 더 불투명하다. 바레인은 패배했음이 확실해 보인다. 예멘은 일단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점에서 승리했다.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탄압에도 운동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슈테판: 독일에서는 아랍 혁명에 관한 논의가 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 팔레스타인 해방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디링케 지도부는 곧 정부에 입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율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는 것도 그런 규율 잡기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주 전 디링케 원내 대표가 가자지구 연대를 위한 플로틸라(구호선), 팔레스타인 연대 캠페인(PSC), 일국가 해결책에 대한 지지, 이 세 가지를 반유대주의의 요소로 거론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역효과만 볼랐다. 논쟁을 통해 가자 지구 연대를 위한 플로틸라에 대해 몰랐던 당원들도 이를 지지하게 됐을 정도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당내 우파가 오판한 것이다.

이집트 혁명의 전진

이집트 민주노동자당이 성장하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인 샤샤 시릭은 최근 창당한 이집트 민주노동자당 모임에 참가했다.

민주노동자당 모임에는 청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다.

참가자 대다수가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노동자 활동가였다.

모임은 활력이 넘쳤다. 사람들은 조직 이름, 작업장에 기반을 둔 지회를 건설할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석 달 뒤 치러질 선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집트 최대 정치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은 이 선거에서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군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조직의 참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본틀을 짰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선거에 관해 다양한 주장을 했다. 어떤 이는 선거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민주주의·노동자 권리 확대를 주장하면서 출마하자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지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을 공장과 작업장에서 벌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노동자와 빈민을 정치에 참가시키는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벽돌 제조업 노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헬완의 앳피흐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슬림과 콥트 교도 사이에서 종파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콥트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바랍니다. 저는 다섯 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앳피히 사람들은 무바라크에 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바라크를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촌사람들이 무조건 반동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민주노동자당이 빈민들에게 가

난과 자선을 뛰어넘는 대안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아동 노동을 과거의 유산으로 만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농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혁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이집트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존재한다.

샤샤 시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11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SC제일은행 파업은 정당하다

SC제일은행 노동자들이 직원 퇴출을 뜻하는 개별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해 6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90퍼센트 이상이 참가한 이 파업은 일부 업무에 차질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투쟁에 놀란 사측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공격의 칼날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겨누고 있다. 20년 가까이 제일은행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자들의 임금을 절반 이상 깎고, 결국 재택근무를 시켜 회사에서 내쫓겠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성과급제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정당성을 부여한다. 보수 언론들도 “귀족 노조”, “시민 불편” 운운하며 성과급제 도입 여부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은행 자본가들의 광란의 돈 놀이와 과열 경쟁, 온갖 탐욕과 부패가 바로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지난 몇 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고통을 전가했다. 그러는 동안 SC제일은행 임원들은 최



6월 27일 제일은행 노동자 3천여 명이 속초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고 12억 원의 성과금을 챙기며 돈잔치를 벌였다. 이런 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철밥통”이니 “귀족”이니 떠드는 것은 역겹다.

은행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할 기준일 뿐이다.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는 SC제일은행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은 지옥 같은 경쟁의 레이스를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노조가 “개별 성과급제가 아니라 점포별 성과급제”로 요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 제도도 노동자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들은 SC제일은행 파업이 “메가뱅크와 매각 등을 두고 악화일로에 놓인 금융권 노사관계”에 기름을 부을까 봐 걱정한다.

실제로 기층에서 끓고 있는 불만은 최근 금융 노동자 3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파업은 흔들림없이 계속돼야 하고 금융노조는 “연대 투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진 제공 금융노조

박설

명동 철거 반대 투쟁



명동 3구역 카페 '마리'에서 농성하고 있는 세입자들

제2의 용산을 만들려 하는가

지난 6월 14일부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명동 3구역 세입자들이 이주와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카페 '마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학생·시민들이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재개발 시행사는 명동성당 맞은편 일대(향린교회도 포함돼 있다)를 5천억 원을 들여 재개발해 금융특화지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재개발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지분을 투자해 만들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영업보상금 1개월치를 더 보상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던 세입자들을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몰고 있다. 용역강패들의 폭력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재개발 업체는 지난 4월 8일 새벽에 강패를 동원해 명동3구역 강제철거를 단행했고, 용역강패 3백여 명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몰아냈다. 급기야 6월 19일에는 농성장까지 철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재개발 업체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명동구역 세입자들은 민주노동당, 다함께 등과 함께 중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중구청과 서울시가 건설·금융자본과 함께 명동을 ‘제2의 용산’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동 철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산참사와 두리반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명동 3구역 배재훈 세입자 대책위원장은 “연대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사명감을 느끼게 됐고 승리의 경험이 하나씩 쌓여서 눈덩이가 불어나듯 커졌으면 한다”고 했다.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는 “저들의 힘이 강하지만, 도덕성이 없으므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명동3구역 세입자들은 1인 시위와 농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필요하다.

이재환

현대차

활동가들이 투쟁 선동을 시작하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 터졌다.

전·현직 대의원 열세 명을 포함해 97명이 근무 중에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발각됐다. 사측은 이 사건을 이용해 “도박하려고 타임오프에 반대했냐”고 비난했다.

좌파 현장조직 금속민투위의 일부 회원들이 박종길 열사 장례식날에 골프를 치러 가 원성을 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노조 대의원·간부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실망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타임오프 저지 투쟁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전임자와 상당수 대의원들을 제어할 현장 조

합원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이들의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지급해 조합원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투쟁이 가능하겠냐’, ‘지도부 비판을 중단하라’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직은 작지만 소중한 시도가 일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한 활동가들과 좌파 현장조직에 속한 일부 활동가들은 ‘노동자살리기 주간2교대 정취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구성해, 최근 29명이 참가하는 홍보전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투단은 끈기있게 활

동을 지속하며, 개방적으로 더 많은 조합원·활동가들을 결합시켜야 한다.

공투단 외에도 최근 주요 좌파 현장조직들이 공동으로 투쟁을 건설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편, 7월 22일 대법원 판결 1주년을 기점으로 투쟁을 시작하기로 한 비정규직지회는 서둘러 조직을 추스려야 한다.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전직 임원에 대한 탄원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혀선 전주·아산과 함께하기로 한 공동 투쟁의 기회를 유실할 수도 있다. 지회는 이제라도 탄원을 철회하고 지도부를 선출해 일상 활동을 복원해야 한다.

모승훈

전교조



10만 명 이상이 성과급제 반대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불만이 높다.

성과급 폐지 투쟁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지난 10여 년간 임금 인상분 중 상당액을 성과 상여금으로 대체하고 올해부터 학교 간 차등 성과급까지 도입해, 교사들의 임금 격차가 최대 1백 52만 5천5백 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 차등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성과급 평가 기준으로 제시되는 보충 수업 개설률, 일제교사 성적 향상률 등이 강제 보충과 야간자율학습, 일제교사 대비 파행 수업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급은 또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교사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단결된 투쟁을 벌이기 힘들게 한다.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 교사 간 균등액수로 분배, 호봉순 분배 등의 방식으로 성과급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성과급을 ‘우선 받고, 이후에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일단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다. 교과부는 이렇게 분배할 때 징계하겠다는 압력을 넣고 있는데, 교사들의 힘이 약한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자신이 받은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약점을 아금아금 비집고 들어와 성과급을 점차 확대했다.

따라서 성과급을 전면 폐지하고 수당화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교사들이 단결하는 데 유리하다. 그동안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됐던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도 되찾을 수 있다.

물론 전교조 지도부도 그동안 성과급 폐지와 수당화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실천적으로는 그에 맞게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분배나 반납을 중심으로 싸워 왔다.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상반기 동안 무려 10만 4천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매우 높다.

전교조 지도부는 이런 교사들의 불만을 받아 성과급 확대 시도를 실질적으로 막아야 한다. 성과급 폐지와 수당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조합원

이 글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론노조

조중동 방송에 맞서는 언론노조 투쟁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 방송 특혜와 수신료 인상에 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강택 위원장은 6월 29일 현재 단식 7일차를 맞고 있다.

미디어랩은 광고주들이 방송 편집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KBS, MBC, SBS의 광고를 독점 공급한다. 또 지역 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매체들에 광고를 배분하는 구실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놓고는 정작 그 광고 계약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다.

언론노조 등은 이렇게 될 경우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들에게 광고를 몰아 쥐 방송의 독점성이나 공정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예 법 제정 자체를 미루며 이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또 KBS 등의 재정 부족은 수신료를 올려 메꾸려 한다.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조처에 반대하고 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친 언론 장악 저지 투쟁에서 일관되게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사실상 수신료 인상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한 바 있다.

이강택 위원장은 민주당이 “꼬리를 내리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이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언론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장호중

독자토론광장

7월 1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내가 겪은 공동 지방정부의 모순

헛수고를 하는 것을 ‘삽질을 한다’고 한다.

나는 얼마 전부터 그 시쳇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강제로 삽질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남시청에서 도로와 하수도를 관리하는 하남시청 수로원·준설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20년을 근무해도 시급 6천 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민주노동당 하남시당은 적극적으로 수로원·준설원 노동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조직화에 성공했다.

민주노동당 하남시당은 현재 민주당 소속인 하남시장이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했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하남시장은 노조탄압에 나섰다.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괴롭히고, 노조가

입은 곧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고 겁박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하던 일을 삼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하루 종일 수챗구멍의 악취를 들이마시며 삽질을 하던 60세 정년을 앞둔 노동자는 병이 나서 결근을 했고 입이 다 열어서 밥을 먹기 불편하다 호소했다. 결국 노조 가입 사실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전원이 탈퇴하게 됐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하남시당은 이들의 탈퇴를 방지했다. 하남시장이 노조 탄압에 나서자 민주노동당 하남시당은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 활동으로 닥칠 수 있는 갖가지 고통을 알려 줬다. 노조탄압이 이어질 때 공공노조는 하남시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제안했으나 민주노동당 하남시당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1인시위 자제를 촉구했다.

물론 민주노동당 하남시당은 공동 정부를 구성한 정당답게 탄압을 중단

시키려고 수차례 시장을 면담하고 읍소했다. 그러나 하남시장과의 싸움은 선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0일경 공공노조는 하남시장이 보이는 곳에서 기습적으로 팻말시위를 한 후 항의전화를 받게 됐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민주노동당 하남시당 임원의 항의전화였다.

민주노동당은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나는 평당원으로서 할 말을 잃었다.

수로원·준설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기습시위가 있는 다음 날로 중지부를 찍었다. 이제 수로원·준설원 노동자들은 더는 삽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로원·준설원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서민의 정당’이라는 말에 더는 감동하지 않는 것 같다.

장혜진 노무사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성 기업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본 세상

전 유성기업의 아주 평범한 조립원입니다.

이번 사태로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것은 미쳐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서울대 학생이 우리 비닐하우스(농성장)를 찾았습니다. 그 학생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싸움과 학생 여러분의 법

인화 반대 싸움은 시키면 자본가들의 추악한 야망을 거부하고 거기에 맞서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이루려는 더러운 야망 앞에 더는 속죄양이 될 수 없으며 힘없어 거리로 밀려나고 돈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본가들은 우리들의 피로 쌓은 돈으로 주인과 노예의 확실한 선을 그으려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싸움이 멈추면 대한

민국은 자본가들의 마당이 될 것이고 저와 후배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앞이 캄캄하고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몸과 가슴에 피멍이 들고, 피눈물이 흐를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당당함이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린 압니다.

양희열

‘반값등록금’ 촛불시위에서는 지도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지난 호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평가와 전망’ 기사에서 최미진 기자가 “운동의 요구를 확대”하고 “아래로부터 투쟁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한 점에 공감한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자발성과 지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2008년에는 지도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아래로부터 투쟁이 활성화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올해 촛불시위에서는 지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위 문장 자체가 모순된 진술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활성화되도록 “이끄는” 행위가 바로 “지도” 아닌가?

최 기자의 진술은 자발성과 지도를 대립된 것으로 파악하는 설명 방식이다. 그러나 순전히 자발성에 기초한 것처럼 보

이는 운동에서도 그 내부에는 의식적으로 그 운동을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복수의 지도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편, 최 기자는 높은 자발성을 대중의 높은 사기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하는 듯하다. “2008년에는 우파 집권으로 개혁주의 지도부의 사기가 떨어졌지만, 대중의 자발성은 충만했다”는 구절이 그렇다.

그러나 2008년 촛불항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중의 사기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초반에 위기감이 팽배했다. 대중이 느끼는 위기감의 강도에 비해 개혁주의 정치세력들이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 자신이 절박한 심정에서 폭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운동 초기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 운동의 등장에 당황했고, 그 때문에 초기 행동은 이들의 통제 밖에서 나타났다. ‘높은 자발성’이라는 표현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통제 밖에서 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을 지칭한다.

반면 2008년 촛불항쟁 후반부터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다시금 운동에 대해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후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자본가 야당과 동맹하는 인민전선 정책을 펴며 대중의 투지를 자제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말기적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자신감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수동적 급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올해 촛불시위가 2008년에 비해

답변

정병호 씨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한다. 내가 쓴 짧고 다소 허술한 문장에 잘못된 해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었는데, 정병호 씨가 고맙게도 이를 세심히 짚어 줬다.

그런데 나 역시 지도와 자발성을 대립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2008년에도 지도의 요소가 투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었다. 물론, “2008년에는 지도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등록금 시위와 대조함으로써 마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원하게끔 서술한 것은 문제였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지금의 촛불시위 사이에는 상대적 차이도 있다. 2008년에는 자발성주의가 대유행해, 지도라는 요소가 왜 필요한지, 어떤 지도가 올바른 것인지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반면, 올해 촛불시위에서는 자발성



6월 2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현대차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동지를 방어하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 동지가 하청업체 소장과 조장의 끊임없는 성희롱에 시달리다 어렵게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직·감봉이었다.

그녀는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복성 징계 해고를 하고 폐업을 해 버렸다!

여성 동지는 용기를 내 복직 투쟁을 시작했다. 아산공장 정문 앞 1인시위, 서울 서초경찰서 노숙 농성을 하다가 지금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성희롱 문제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탄압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

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탄압했던 현대차가 여성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노동자들은 이 여성의 ‘과거 행실이 안 좋다’는 식의 소문 때문에 여성노동자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여성을 음해하려는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여성의 ‘과거’가 어떻든 그것은 성희롱 피해자를 방어하는 데 조금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성희롱과 부당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고, ‘성희롱을 당해도 마땅한’ 여성은 없다.

여성 차별로 이득을 얻는 것은 현대차 자본과 같은 악랄한 기업주들뿐이다. 우리는 저들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이 여성 동지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같은 노동조합 동료인 우리가 나서서 원직복직 요구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동석 현대자동차 정규직 남성 노동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서울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연사: 최용찬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독일 베를린 경제대학 '세계화와 노동정책' 석사과정 졸업)
일시: 7월 5일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B03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h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최미진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철화하라

김진숙 지도위원과 노동자 10여 명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몸을 묶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정리하고 철화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폭력 진압으로 끌려 나온 1백여 명도 채길용 노조 집행부의 ‘파업 철화’ 선언을 거부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도, 정부도, 노조 집행부도 우리를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희망의 버스’ 이후 한진중공업 파업이 사회적 지지를 넓혀 나가자, 투쟁 확대의 싹을 잘라내려고 법원과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저변에 뿌리깊은 울분과 분노를 키웠다. 2차 희망버스 참가 문기가 쇠도하고, 금속노조 등도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노동자들의 반발을 뿌리치고 파업 철화를 선언한 채길용 집행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민주노조의 깃발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굴복했다는 이들의 변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채길용 집행부의 배신은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노조 깃발만 지키면 된다는 ‘조직 보존’ 논리가 얼마나 해악적인지를 보여 준다.

채길용 집행부는 꺼져가는 투쟁에 불을 밝혀 준 ‘희망의 버스’를 “부담을 남기는” 골치아픈 일로 여겼다. 반대로, 정부와 사측의 ‘강제 퇴거’, 경찰력 투입 압박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힘으로 여겼다.

이들은 정리하고 문제를 놓고 화해할 수 없는 양 세력 — 자본 · 정부와 노동자들 —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 노동자들을 버리고 자본에 투항했다. 결정적일 때 소심함과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다.

방패막이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는 이미 2009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1천2백여 명이 해고를 당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했다. 비정규직을 방패막이 삼았지만,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돼 정규직을 향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일곱 달 넘는 파업 기간에 “강력한 투쟁은 고립될 수 있다”며 이유에 타격을 줄 점거파업 전술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어차피 싸워도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좌절하



“회사도 정부도 노조 집행부도 우릴 버렸지만, 투쟁을 멈출 수 없다.” 6월 27일 85호 크레인에 올라 투지를 다지는 노동자들

며 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

민주노총 · 금속노조 등의 지도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 KEC 등 점거파업 때마다 민주당의 중재에 기대며 연대 투쟁 건설을 회피한 것도 이런 회의감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가 “부산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선명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길 꺼린 것도 운동 내 계급연합 논리가 퍼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상황에선, 노조 지도부의 한계와 정치적 약점을 비판하며 투쟁을 선동할 대안적 지도력이 필요했다.

활동가들은 더 일찌감치 조합원들의 불만을 결집해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며 점거파업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이것은 지금 온 힘을 다해 투쟁하는 활동가들이 돌아봐야 할 쓰디쓴 교훈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지금 올바르게도 집행부의 굴복 강요를 거부하며 비대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주장하듯, 채길용 집행부의 파업 철화 선언은 원천 무효다. 금

속노조 지도부는 투쟁의 대의를 배신한 채길용 지회장과 간부들을 징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 전국회의 지도부도 파업 철화 선언에 가담한 자신의 회원들을 공개 비판하고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그간 책임을 방기하다시피 한 연대 투쟁을 실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힘을 분산하지 말고, 단결해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희망의 버스’ 조직에도 적극 힘을 쏟아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살리자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키자는 호소에 함께하자.

박설

2차 희망의 버스 탑승 요령

일시 : 7월 9일(토) 오후 1시 출발

장소 : 전국 동시 다발 (서울은 시청광장 앞 재능교육비정규직 농성장)

참가비 : 3만 원 (학생, 어린이는 ‘반값 참가비’)

문의 : 다음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02-363-0610

송경동 시인 인터뷰

“연대가 희망입니다”

침승처럼 끌려나온 조합원들, 크레인에 온몸을 묶고 저항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노사 합의가 부당하다는 증거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합의는 직권조인과 다를 없습니다. ‘정리하고 철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희망의 버스’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패배감을 불식시키고 연대해서 싸우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자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도 크레인 위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김진숙 동지와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밖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 들을 위해서라도, 2차 ‘희망의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희망의 버스’를 지키고 정리해고를 분쇄하려고 조직적인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한 기업의 정리해고 문제가 아닙니다.

온 사회가 2차 ‘희망의 버스’의 힘있는 출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리 조영지

인터뷰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성기업

“연대의 힘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유성기업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경찰 · 용역 들의 극심한 폭력 사태 이후 집회는 원천 봉쇄됐다. 충남도 경찰청은 건설노조 충남지부 부지부장을 포함해 간부 세 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부상당한 조합원들이 치료 중인 병원에까지 찾아가 연행하려 했다. 아홉 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출석 요구서를 쥐어 주고는 ‘인증샷’도 찍어 갔다.

사측도 개별 복귀를 설득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다.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이고 민중의 방망이입니까? 유시영 사장과 용역 들의 방망이 아닙니까?”

염종진 조합원은 비닐하우스를 감시하며 투쟁을 가로막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집행부를 잡아 놓으면 우리가 투쟁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이기자는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다행히 최근 충남 지역의 정당 · 단체들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은 ‘직장 폐쇄 철화와 편파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경총은 정치인들더러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버티니 정치인

들도 나서게 됐다”며 “이들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육영수 조합원은 무엇보다 민주노총 · 금속노조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식으로든 연대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다른 곳에서도 그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의 힘을 연결하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역할이 약해 보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각 연맹별, 권역별로 순회해 공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라도 벌여 준다면, 우리는 그 뺨을 믿고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6월 27일부터 쟁의권을 확



6월 18일 유성기업 공장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보한 만큼, **각 작업장에서 임금·단체협약 투쟁을 실질적으로 벌여서 경찰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도 연대 투쟁과 파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공장 앞 집회도 가로막는 경찰력이 분산되고, 우리의 결속력은 배가될 수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충북본부의 ‘희망 커

피’와 ‘희망 폭발’이 기다려집니다.” 꾸준한 연대로 노동자들의 사기를 유지시키고 있는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모범이 더 확대돼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희망을 보여 주자.

김기선